

2017 충남공공디자인 세미나

「공공디자인을 통한 지역공간 재생협력방안」

토론문

- 권영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
- 김주연 (홍익대학교 디자인콘텐츠대학원장)
- 박천보 (한밭대학교 건설환경조형대학장)
- 방재성 (충남공공디자인센터장)
- 임준홍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장)
- 정석완 (충청남도 국토교통국장)
- 최정한 ((사)공간문화센터 대표)

충남도 차원의 대응 및 공공디자인 활용 방안

충남연구원 연구실장 권영현

○ 도시재생정책 대상 변화

- 수도권 및 대도시의 쇠퇴도시와 차별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유형과 시·군에서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유형에 따른 수요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 과거 도시재생 정책 대상이 소규모 지역(군 단위)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변화 기조의 인식과 관심확대를 위한 정책의 변화 내용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 6개 유형 ①정비사업 보완형 ②저층주거지 및 매입 ③역세권 정비형 ④공유재산 활용형 ⑤혁신공간 창출형 ⑥사회통합 농어촌 복지형(생활복지주택, 농어촌복지 공유주택, 중소도시 시내 정비)로 농어촌 지역이 포함된 내용의 면밀한 파악과 공지로 지자체 관심을 확대하여야 함
- 그럼에도 현재 구상으로는 규모 있는 도시 중심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 유형에 시·군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 규모를 갖춘 지구·구역 단위에 못 미치는 소규모 사업 구상이 요구됨

○ 공공디자인의 역할 재구상

- 공공디자인의 태동이 국토계획, 지구단위 계획, 경관 등이 실행 과정에서 사유 재산 적용한계, 장기 사업에 따른 가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력이 사업 효과의 공익성과 파급력이 높은 공간 공간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음
- 그러나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공간 전체 구상이 아닌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개선으로 제한적으로 인식되었고 미술장식품(가로 조형물), 벽화 사업 등 공공미술과 혼재되면서 충분한 역량 발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의 기초(목표)와 도시재생뉴딜 유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비사업 보완형, 저층 주거지 정비 등 사업 유형이 정주 공간(주거지) 및 공공청사, 산단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 공공디자인과 연관이 높은 기반시설, 가로정비, 공공공간, 시장정비 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크게 건축물 정비 및 조성 분야와 도시재생 기반시설로 양분한다면 기반 조성 분야에 공

공디자인의 역할을 확대시키며 선별된 대규모 사업에서 지역 현황과 특성을 살린 소규모의 사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구축되고 실행이 이루어진 '보행자 중심가로', '노인친화도시환경', '범죄예방환경(CEPTED)'의 활용이 요구됨/가이드라인에 따른 정형적인 사업 형태의 탈피

○ 충남도 차원의 대비

- 그간 광역지자체 차원의 역할은 지자체에서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인준 등 제한적인 시점에서 광역지자체 주도의 사업 유형이 생겨남에 따라 도의 활동 영역이 확대됨
- 도 전담조직(건축도시과 내) 및 도시재생위원회의 활성화와 시·군 중 미 구축된 지역의 조직 구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도시재생센터의 경우 크게 분야별 전문가, 지역 전문가, 활동 전문가로 구성됨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분야별 전문가 부족, 연임 제한, 활용시기 등)이 따르기 때문에 '중복 기능 담당', '전문 인력풀의 범용' 활용으로 각 지자체에 요구되는 위원회 및 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약을 극복하는 방안 활용이 필요함

충남도가 도시재생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남도 국토교통국장 정 석 완

- 우선, 지금까지 충남도가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의 말씀을 전하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충청남도가 도시재생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 사실, 지금까지 충청남도는 도시재생보다는 도시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 그 이유는 충남도에는 성장하는 도시가 더 많고, 도시재생이 참 어려운 일이며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최근 많은 시군은 인구감소를 넘어 도시가 축소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더 이상 도시재생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책에 대해 고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시·군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충남도의 역할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와 시군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동안 도시재생사업에서 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의 역할은 많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다행히도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재생에 있어서도 충남도의 역할을 명확히 찾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은 가장 지역적 문제이기 때문에 충남도와 시군이 그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생각하는 충남도의 역할의 방향은 충남 15개 시군이 지역에 맞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역할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 충남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시, 군과 협력하여 발굴하겠습니다.
 - 이에, 우리 충남도는 충남연구원과 충청남도 도시재생위원회 등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셋째, 오늘의 주제인 ‘디자인을 통한 지역공간의 재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충남도는 지난 10여 년간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충남공공디자인센터」를 설치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도시 재생과의 연계성 강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 도시재생은 상당히 종합적이고 융·복합 적이며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 디자인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을 접목하고 융·복합 할 때 도시재생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국토교통국 건축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팀과 공공디자인팀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재생에 충남만의 공공디자인, 시군의 공공디자인이 접목 될 때 도시재생의 특색은 더욱 강조되고 충남 도시재생의 색깔도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 계시는 전문가와 충남발전연구원이 함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점차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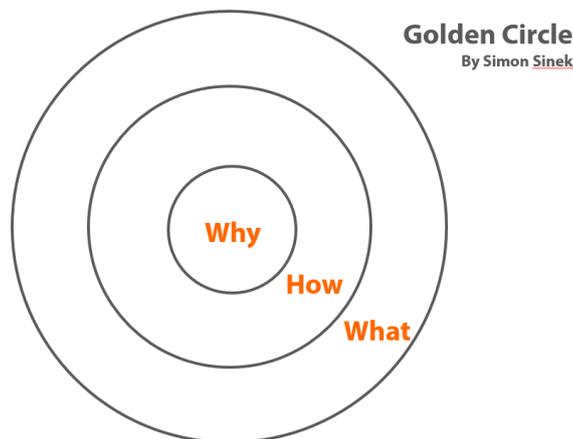
○ 마지막으로, 시·군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분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의 도시재생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도시재생」이 될 것이며, 이에 충남도의 역할과 시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 시군에서도『충청남도 도시재생』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야기 해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필요시 충남도와 충남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도시재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그룹」을 구성 하겠습니다.
- 타 광역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하여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구축과 민간지원’을 위한 충남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군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도움을 드리며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기 계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만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충남공공디자인 세미나 <디자인을 통한 지역공간의 재생>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회장/홍익대학교 디자인콘텐츠대학원장 김 주 연

저는 오늘 지역공간의 재생에 관하여 디자인의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란 말을 하면 우리는 멋진 디자인 작업의 결과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왜 디자인을 해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은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사이몬 시넥이 TED 강연에서 말했던 골든써클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골든써클은 중첩된 원이 3개 있습니다. 외각부터 What How Why 가 안쪽 방향으로 배치된 다이어그램입니다. 가운데 Why 왜 는 이영범 교수님의 이슈 2: 무엇에서 왜, ‘성과에서 가치로’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사이몬은 성공적인 사람, 기업가들의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What 모두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안다. How 몇몇은 어떻게 하는 지도 안다. Why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왜 자신이 그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다. Why 왜 일을 하는가? 의 질문에 혹자는 돈을 벌기위해서 라고 답하기도 하겠지만 돈을 버는 것은 왜가 아닌 일의 결과로 받는 것입니다. Why 왜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념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왜 조직이 존재 하는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컴퓨터 산업을 예로 듭니다. "What 우리는 훌륭한 컴퓨터

를 만듭니다. How 그것들은 매우 아름다운 디자인에,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합니다." 구입하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생산제품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영업을 이루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도 이렇게 영업합니다. "What 여기 새로운 차가 있습니다. How 이 차는 연비가 좋으며, 가죽 시트가 있습니다. 구매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컴퓨터 회사인 애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Why 우리가 하는 모두 것들, 우리는 기존의 현상에 도전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How 기존의 현상에 도전하는 우리의 방식은 제품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며, 간단히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What 우리는 방금 훌륭한 컴퓨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입하고 싶은가요?"

애플이 분명히 다른 것은 Why 왜 회사의 '목적, 추구하는 가치, 신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본질 적으로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애플은 우리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확한 그들만의 신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의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제품을 구입하지만, 실제로는 애플의 신념(당신이 하고 있는 것의 이유)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도시재생에 있어 우리도 Why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생도시가 추구하는 모든 이익관계자들이 공유하여야 할 가치, 신념, 목적, 꿈에 대한 명확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신념, 꿈에서 도시 재생은 출발하여야 합니다. 그 꿈이 확실할 때 그 결과로, What으로 나타나는 도시재생 디자인은 지속성과 차별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분들은 도시의 삶에 대한 자존감이 분명히 높을 것입니다.

두 번째, How 어떻게 접근하여야 할 것인가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nippon vision'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나가오카 겐메이 라는 '디자인 활동가'가 시작했던 프로젝트로 47개 일본도시의 '일본다움'을 디자인의 시점으로 시간성의 가치를 갖고 있는 상품들을 개발해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서울 이태원에 D&Department 라는 상점이 있는데 그 곳에서 상품들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가 시작한 'nippon vision'은 흥미롭게도 관의 지원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제작 지원금으로 만들어진 '팔 곳 없는 상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시장의 관점에서 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을 발굴, 개발, 현대생활에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상품을 디자이너 스스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개발된 상품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D&Department 상점을 지역마다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적절한 가격의 '일본다운' 상품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일본다움' '도시다움'의 D&Department Dinning 식당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0년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의 심포지엄을 진행할 때 그를 만났는데, 놀라웠던 것은 한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그는 거의 1년 정도를 매주일 한 번씩 그 지역의 키맨(그가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을 만나 하루를 그 집에 묵으며 그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한 두 번의 방문으로 리서치를 마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통해 그는 아마도 그 누구도 그 지역의 가치로 생각

하지 못했던 것도 파악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에 소통될 수 있는, 순환될 수 있는 가치를 발굴’ 하였고, 고유한 정서의 ‘지역다움’을 상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나카오카 겐메이가 진행했던 일은 도시재생이 아니고 상품제작 이었지만 ‘지역다움’ ‘자기다움’을 어떻게 발굴 할 것인가? 에는 똑 같이 중요한 도시재생에도 그의 접근방식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는 키맨이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요한 키맨들을 만나는데 시간과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시재생이 완성되었을 때 ‘장소의 가치’ ‘장소자산’이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의 결과는 그 도시의 품격과 자존심으로 환원 되어야 합니다. 전국이 도시재생이 진행 될 터인데 ‘스토리가 없으면 또는 즐거움이 없으면’ 도시재생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Why 신념, 꿈’이 없이 선부른 결과 중심으로 디자인을 접근한다면, 아마도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는 무기물과 같은 밋밋한 결과가 될지 모릅니다. 충청남도는 모든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시작에 Why와 How를 미리 긴 호흡으로 자존심을 갖고 고민을 시작한다면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 품격의 재생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정책 및 지자체 대응

한밭대학교 건설환경조형대학장 박 천 보

- 도시재생을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새 정부에서 제안된 도시재생뉴딜 6대 유형, 15개 사업모델(안)이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도 가능한지 궁금해 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확정된 계획이 조속히 발표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현재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외에도 국토부 내부 및 기타 관련부처에서 재생관련 사업들이 개별법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새롭게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또 하나의 사업으로 추가 될 수도 있음
-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되어 진행되고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관계없이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을 할텐데, 이럴 경우도 새 정부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새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취지에 따라 사업개편이 일부 이루어지겠지만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특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장점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충청남도의 경우, 국토부에 지속적인 질의를 통하여 향후 사업방침의 확정을 주문하고 있는 형편이며,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중이거나 계획 중인 지방정부도 향후 중앙정부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음
- 따라서 가능한 이른 시기에 방침이 확정되어야만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지속적인 도시재생 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사료됨
-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지방정부의 담당공무원 분들을 위해서는 그동안 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간의 관계정립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역할을 도와 국토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디자인을 통한 지역 공간의 재생

충남공공디자인센터장 방재성

1. 충남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시스템)' 디자인 필요

- “충남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정립이 필요
- 현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은 농어촌(비도시지역)보다는 도시지역, 중·소도시 보다는 대도시 관점의 접근방식
 - 현재 특별법의 내용과 사업 유형으로 보았을 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흐름 개연성이 높음
 - 6개의 도시재생사업 유형 중 15개 시·군에 적용이 용이한 사업방식은 '사회통합 농어촌 복지형'. 다른 사업유형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에 대한 논의 필요
- 충남의 도시재생사업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이 필요한 시점. 이를 통해 재생사업의 장소와 참여주체, 대상과 내용에 대한 방향설정과 의사결정이 가능
- 충청남도, 15개 시·군, 충남연구원,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충남 내 타 기관, 민간기업, 지역조직, 주민 등 다양한 참여주체의 역할 분담 정립
- 참여주체의 역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군 도시재생 및 디자인 행정의 취약점과 보완방향 도출 (조직, 인원, 예산 등) 후 개선

2. 장소 중심적 접근에 기반하여 기존의 다양한 사업을 연계

- 현재와 같이 기존의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충남만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다양한 사업의 연계에 기반하여 접근할 것인가? 선택의 시점
- 충남에서는 현재도 중앙 부처의 다양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 사업들의 연계만으로도 도시재생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도시재생법 2조의 지자체가 추진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참조
- 중앙부처 공모사업, 도 및 시·군사업을 독립적인 사업단위로 접근하기 보다는 특정 지역(장소)에서 연계할 수 있는 실행단계에서의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
 - 도시재생법 상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활용을 검토

- 낙후된 지역공간 전체를 하나의 통합된 관리단위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함. 쇠퇴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라는 ‘사후처방적 사업집행’ 관점 외에도 충남(농어촌)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사전예방적 공간관리’도 중요

3. 유희(잉여)공간에 대한 대응과 유지 방안이 중요

- 충남은 인구증감이 15개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과소·고령마을이 증가하고 있음
- 인구감소와 마을 내 유희(잉여)공간의 활용이 충남 지역재생의 주요한 이슈라 판단됨. 이와 같은 공간과 장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
- 재생사업이 물리적인 공간과 시설에 대한 과잉 조성이 되지 않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 현재도 농어촌 지역은 다양한 사업으로 유희공간(건축물)이 발생되고 있음
- 경제, 사회, 문화적 재생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공간조성과 이용의 간극을 조정해야 함
 - 물리적인 하드웨어사업과 공간운영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이 병행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들의 총괄, 조정 기능이 필요
 - 지역의 공간을 구성하고 작동하는 다양한 요소(장소, 사람, 콘텐츠)가 연결되고 맞물릴 수 있도록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것에 집중해야 함
-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어떻게 육성하고 추진할 것인가? 지역의 민간조직(기업, 조합, 단체 등)과 주민주도에 의한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에 대한 충남 차원의 고민 필요

도시재생에서에서 공공디자인의 역할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장 임 준 홍

1.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우선, 도시재생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

- 도시재생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충남도·시군, 충남연구원,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역할과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공간적 측면 : 장소중심적-장소집중적
 - 내용적 측면 : 융복합적
 - 절차적 측면 : 주민참여, 협력과 연계기반의 거버넌스
- 도시재생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이 속에서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

2.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공공디자인·도시재생

- 도시재생의 핵심은 주민과 지역사회 참여
- 도시재생의 독특한 색깔 입히기와 공공디자인의 영역-역할 설정 중요
- 주민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공공디자인-도시재생 기법 도입

3. 충남-시군의 협력적 역할 관계 정립

- 지금까지의 도시재생 과정에서 광역정부(충남도)의 역할 미미 (∴)특별법
- 도시재생은 가장 지역적 문제이며, 지역이 주도해야 함에도 충남도의 역할 미비
- 새정부는 ‘연방정부에 가까운 분권’, 지역이 중심이 된 도시재생 추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의 역할 설정이 매우 중요
- 충남도는 충남에 맞는 도시재생정책 발굴, 시군 역량강화와 교류-정보 제공
- 시군은 도시발전에 맞는(도시특성(잠재력)을 살린)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사업효과 극대화
- 주민(상인), 충남연구원과 충남도시재생위원회 등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4.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재구조화 : 제안-승인방식으로 전환·통합추진

[공모사업 구조적 변화 : 제안-승인 방식]

- 충남도 도시재생관련 공모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통합적-체계적 추진
- 우선, 국토교통국 추진 공모사업의 재구조화 및 도시재생 제안사업 체계화
- 매년 공모사업비 + 도시재생 관련 추가 예산 : 통합적-체계적 추진
- * 충남도는 시군의 제어보다는 시군지원개념에서 도시재생 지원체계 구축
- * 국가 공모사업에 체계적-선제적-능동적 대응

(참조자료) 도시재생과 재원 그리고 크라우드펀딩¹⁾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도시재생은 너무 어렵다”고. 그 이유는 도시재생의 기본적 성격을 이해하면 당연하다. 도시재생은 공간적으로는 장소 집약적이고, 내용적으로는 융·복합적이며, 절차적으로는 거버넌스이다. ‘우리는 왜 도시재생을 왜 지역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 중앙부처와 시군부서는 상호 협력이 필요한 융·복합 사업을 추진해본 경험도 적다. 그리고 주민과 상인을 이해하고 설득하려는 인내심도 약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시재생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돈이 없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결론짓는다. 과연 돈 때문일까? 도시재생의 기본적 성격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는 아닐까? 필자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 글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도시재생의 성과를 높이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재원에 대해 작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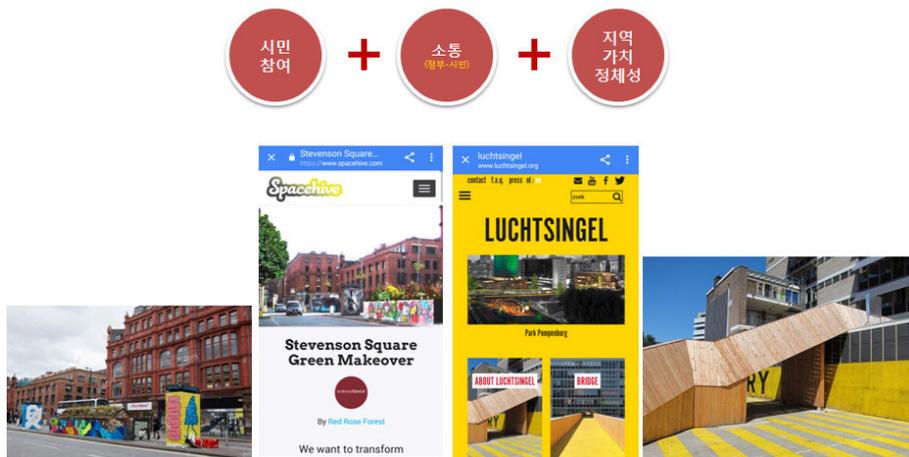
첫째, 재원확보 방법이다. 새정부의 도시재생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는 연 10조(5년간 50조)라는 사업예산이다. 정책자금 2조, 주택도시기금 5조, 공사 3조이다. 5조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HUG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있고, 도시재생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방의 작은 도시공사도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많은 사람들이 사업성 약하다는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위해서이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7) 참조.
 <그림 1> 크라우드펀딩의 흐름

1) 임준홍, 2017. 7, 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지 7월호 원고의 일부임

이에, 재원확보 방법의 새로운 시도도 필요하다. 그 방법의 하나로 크라우드펀딩에 의한 도시재생 자금 확보를 제안한다. 크라우드펀딩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민, 기업, 정부 누구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반짝이는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를 공감하는 누구나 돈과 현물, 재능을 통해 재원확보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은 다양하며²⁾, 누군가는 이러한 도시재생에서의 크라우드펀딩을 ‘작은 참여가 가져온 놀라운 경험’이라고 말한다. 아이디어와 시민참여에 기반한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재원 확보야 말로 도시재생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재원 확보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SNS 기반의 도시재생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필요하며,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적 ‘펀드’가 필요하다. 이는 매년 정책자금 2조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익성 등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실현가능성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이미 검증받았기 때문에 도전과 실천의 문제로 넘어 갔다.



<그림 2> 크라우드펀딩 사례(왼쪽: Stevenson Square, 오른쪽: 네덜란드 Luchtsingel)

둘째,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자금은 중앙정부 반, 지방정부 반으로 이루어졌다. 자치단체의 50억 사업비는 큰 부담이다.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우리 도시에 도시재생이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느 지역인가? 진정 어떤 사업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마중물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치단체 재원 50억을 마련한다.

현재 운용되는 중앙과 지방의 매칭펀드 등 운영방식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 단계별·내용별로 차별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첫 단계인 도시를 명확히 진단하고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수립비는 계획수립을 원하는 도시 모두에게 100% 중앙이 부담하여야 한다. 자치단체가 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방도시의 쇠퇴는 대도시와 수도권성장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2)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에는 기부(후원)형, 보상형, 대출형, 지분형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 유형이 조합·융복합화 한 하이브리드형도 있다.

역량강화를 포함한 도시재생센터의 운영비도 100% 부담하여야 한다. 자치단체가 도시재생역량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재생 역량부터 키워야 한다.

지역사회의 고민 끝에 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재생사업 성격에 따라 50%-100%까지 차등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행정은 머리가 아프고, 형평성 문제, 특혜 문제가 걱정되겠지만 차근차근 변해야 한다.

셋째, 재원 집행방법을 대폭 수정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포괄보조금 제도’의 성격과 역할을 100% 적용하면 된다. 무늬만 포괄보조금 제도가 아니라 진정한 포괄보조금 제도 방식을 운영하면 된다. 도시재생은 융복합 사업이고 주민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업비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역발전에 진정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진행과정에서 사업항목도 변경하고, 개별 사업간 사업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긴 기간이 소요되는 도시재생사업이 발생할 경우 연도별 사업비를 이월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역시 행정처리 어려움, 감사 등으로 힘들겠지만 제도를 바꾸고 시도하여야 한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선정기준이 중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장소중심적 재생사업’, ‘융복합 재생사업’, ‘주민참여적 재생사업’인가?”가 산업선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6개 유형, 15개 모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안 사업들이 ‘진정한 도시재생사업인가? 도시재생에 효과가 있는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사업 선정은 국가가 아닌 광역정부가 하여야 한다. 지역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전문가 중심의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선정 결과는 지역문제 해결에 진정 도움이 되기보다는 사업의 겉모습에 선정여부가 좌우되기도 하고, 모든 도시의 도시재생사업을 획일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정책은 “가장 지역적인 문제를 가장 중앙의 시각에서 추진하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도시재생 2.0’은 지금의 경험과 반성을 바탕으로 지역이 중심이 된 진정한 도시재생정책이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새정부가 말하는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분권’의 혁신사례가 되길 바란다.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의 역할과 과제

(사)공간문화센터 대표 최 정 한

1. 공공디자인작업들

- 정부·지자체의 프로젝트사업들
 - 서울시의 스트리트디자인(포장마차), 광주시의 어번폴리프로젝트 등
 - 셉테드, 스트리트퍼니처, 화장실 개선 등
- 커뮤니티디자인,소셜디자인,도시디자인
 - 영등포 쪽방촌프로젝트, 홍대정문앞 어린이공원디자인, 성미산마을극장 등

2. 공공디자인의 공공성은 조직해야 할 대상이다

- 디자인의 공공성을 뒷받침하는 세축
 - 창조성(사람), 관계, 공간·장소
- 정체성, 컨셉, 공유, 소통, 참여, 사회적 실험, 거버넌스 등의 키워드가 중요
- 도시/마을속의 디자인
 - 도시의 공공성과 마을의 공동체성을 일치시켜가려는 노력이 중요
 - * *마을* : 개인의 삶으로부터 출발 / 자기 삶의 가치를 기반으로 공간,장소,지역을 재구성 하려는 실천적 단위 / 공동체적 속성,한계는 현실적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구속성과 폐쇄성, 정주성 불편한 관계를 내포
 - * *도시* : 개인과 개인 그리고 공간이나 장소 마을을 연결하면서도 그것들을 넘어서는 삶의 가치를 담아내는 단위 / 느슨한 연대, 공리주의, 합리적 공공성, 미래지향성, 연결성과 이동성,개방성,관용성

3. 몇가지 사례들

- 홍대정문앞 어린이공원디자인
 - 2002월드컵행사 연계프로젝트 : 법제도의 한계, 거버넌스와 참여의 한계, 놀이터프로젝트를 통한 문화광장화, 문제장소화와 리디자인

○ 코펜하겐 스트로이헤거리

- 60년대 세계최초의 보행자거리 조성(조성을 위한 사회적 실험들)
- 3차례 대화재이후 도심부 르네상스풍 건축물들의 복원

○ 기타 유희공간 활용

- 민간위탁제도, 거버넌스, 활용방식 등 다양한 법제도상 한계

4. 도시·마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디자인의 공공적 혁신이 필요

○ 삶과 도시의 변화 그리고 지역성

-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 디지털디바이스기반의 라이프스타일, 서울과 지방의 관계, 글로벌차원의 이동성 등 삶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공성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거버넌스, 참여, 디자인방식에서 혁신이 필요하다

○ 이전보다 훨씬 개방성과 관용성이 요구된다

- 장소가 플랫폼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 코워킹,코리빙 등등
- 공간 및 시설디자인, 구성콘텐츠 및 운영구조 등에서 혁신이 요구됨
- 사례) G밸리 청년무중력지대(스페이스 노아)